

고품질 시공, 원가절감등 자생력 강화로 위기 극복



「월간 설비공사」는 최근 급격하게 진전되는 IMF 체제 하의 설비건설업계의 현실과 주요자재가 현황 등을 알아보고, 정부(강팔문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장)·학계(홍진관 경원대학교 건축설비학과 교수)·연구기관(문정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 연구위원·계획학박사)·업계(유성현 동남기연(주)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IMF시대의 설비건설업계 위기 극복」에 대해 조언을 듣기 위한 場을 마련했다. 아무쪼록 본 場이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편집자 註]

IMF시대의 설비건설업계 위기극복

1. IMF한파로 인한 건설업계 현황

IMF한파가 불어닥친지 4개월째 접어들었다.

IMF한파는 여러모로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좋은 싫든 우리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경영상태를 재점검 하고 성실히 시공하므로써 뼈를 쥐는 고통 속에 거듭나야 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IMF 구제금융 도입 이후 올 2월 말까지 3개월동안 부도처리된 건설업체 수는 총 968개사로 전년동기(96년 12월~97년 2월)의 233개사에 비해 무려 4.2배나 급증했다. 이중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208개사, 전문건설업이 760개사를 기록했다. 이같은 부도업체들 중에는 한라건설을 비롯해 대산건설, 서광건설, 산업, 청구, 보성, 나산종합건설, 극동건설 등 일반건설업계의 100위 이내인 대형건설업체도 8개나 포함돼 있다.

IMF 이후 우리나라 전 산업의 부도업체 가운데 건설업체가 3분의 1에 육박하는 1천여개사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 4개월간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평상시의 3배가 넘는 업체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IMF사태 이후 설비업계는 지난해 12월 34개사의 부도를 시작으로 올해들어 1월 55개사, 2월 38개사, 3월 30일 현재 24개사가 부도처리 되었다. 올해만 해도 117개 업체가 부도처리되어 지난 96년 한해동안 105개사의 부도와 97년 209개사에 비해 올 1/4기 동안 실로 엄청난 수의 회사가 도산한 것이다.

건설업계의 부도행진이 이처럼 지속되는 것은 89년 면허개방 이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자금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며 특히 건설업계의 자금의존도가 가장 큰 종합금융사(22% 수준)의 영업정지가 결정적인 타격을 준 셈이다.

건설업체들의 부도행진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몇 개의 기업체가 이러한 경영위기를 겪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건설업계에서는 올 7월 이전에 건설업계의 70% 정도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은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더욱 암담한 실정이다.

건설업은 선투자가 많기 때문

에 IMF 구제금융 이후 타 산업에 비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금 4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세금)현상의 4중고에 저성장(실체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겹친 소용돌이에서 앞으로 최소한 2~3년간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나마 현재의 고비를 넘긴 업체들의 미래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긴축재정에 따른 공사물량 축소, 물량부족 속에 과당경쟁에 따른 덩핑공사수주는 채산성 악화로 인한 출혈시공으로 재무구조 악화, 자재값 앙등으로 시공원가 부담 가중, 부동산 경기의 동면 등 최악의 환경속에 있다.

건자재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자재구입시 현금 결제를 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겨울동안 쉬었던 건설공사들이 슬슬 기지개를 펴면서 성수기에 접어들어 지난 3월부터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접어들었다.

요즈음과 같이 고통행진을 하고 있는 금리하에서 정상적인 경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과당경쟁과 자

재값 앙등으로 공사의 채산성이 최악인 상황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따라서 자금난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부의 특단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긴축재정에 따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공공공사를 연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수가 포화상태인 건설업계는 일감마저 줄어들어 수주경쟁이 과열되고 따라서 출혈시공을 부르는 덩핑수주는 필연적이어서 채산성이 악화돼 도산의 길로 가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건설공사의 물량을 충분히 유지해 주어야 한다.

□ 설비건설업계의 현실

기계설비는 건축물 및 생산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면서, 그 건축물의 가치추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계설비건설업은 대한설비공사협회의 3천500여 회원사가 연간 15조원 규모의 각종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각종 플랜트공사를 수주하여 외화 획득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설비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한 30만명에 달하고 있어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기계설비공사의 원가구성은 자재비 약40%, 인건비 50%, 기타 세금 및 공과금 등 현금성 관리비가 10%를 차지한다. 대부분 현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으로 받고 있는 어음(공사가 끝난 후 2~3개월 후에 받는다)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조차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제기간도 6~9개월 어음으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주요 설비자재 가격이 품목에 따라 50~120% 이상 인상된 가운데 현금 이외에는 구입이 어려워 공사중단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건설업계는 사상 유례없는 부도사태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어 도산도미노현상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기술력과 경쟁력이 풍부한 기계설비건설업계가 공멸되는 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

의 기반 붕괴는 물론 국내 경제와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더 늦기전에 정부의 실효성있는 특단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2. 자재가 앙등과 현금구입으로 자금난 가중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현금이 부족해 자재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공사대금마저 장기어음이나 대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니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실로 심각하다.

IMF 사태 이후 환율급등으로 자재가격이 30~120% 인상되었다. 이것은 나라 전체가 혼미의 늪에 빠진 것이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일부자재는 출하기피와 단합으로 대폭 인상된 것도 있다.

자재구입 현황은 청동제품과 화학제품, 철강제품은 현금을 쥐야 하고 나머지 잡자재는 상장어음만을 받고 있으며 자사어음은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금 구입시 네고가 났으나 지금은 현금으로 구입해도 인상후 가격에 네고조차 없이 거래되고 있어 설비업계는 여러모로 불리한 실정이다.

IMF시대의 설비건설업계 위기극복

강관의 경우 한때는 생산라인이 스톱돼 공급이 어려웠으나 지난 3월부터 공급이 원활해졌다. 그러나 이 역시 4월부터는 120% 오른 선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한다 동용접봉도 kg당 15,500원 정도 구매하던 것을 요즘은 125%가 오른 34,000원 정도에 구입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름세를 지속하던 배관용 동파이프의 내수가격이 지난 3월 초순부터 규격별로 4.4% 인하됐다. LEM(런던금속거래소)에서 동파이프의 원료로 사용되는 전기동의 평균가격이 톤당 1천 664달러 선으로 전월에 비해 23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동파이프 생산업체인 풍산은 이달부터 출고되는 M,L,K타입의 동파이프가격을 평균 4.4% 내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설비업계는 동파이프의 내림세에 반가움을 표시하면서도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특수상황에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금거래를 감안하면 현재 오른 수준에서 20% 이상은 더 올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노임은 20% 가량 떨어졌으나 자재값이 평균 60% 정도

오르다 보니 자금난의 압박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다.

대한설비공사협회는 설비공사업계가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조달청도 3월중으로 시중구입가와 각종 물가지의 게재가격이 현실과 차이가 많은 것을 감안, 각종 물가지의 가격 현실화 추진과 더불어 4월에는 조달청 가격정보의 현실화에 들어갔다.

유를 남겨두지 않고 짝 짜여진 선에서 청구하다보니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시공을 하고 있다. 또 과거에는 현장에서 흔히 로스자재들이 굴러다녔으나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장에서도 아·나·바·다운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 힘든 것은 투입해야 할 자재가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럽다고 토로한다.

D사는 자재구입이 어려워지

설비 주요자재 가격인상현황

(98. 2. 25. 현재)

품 명	규 격	단위	인상금액		인상률(%)	
			97.12.초	98.2.말	97.12.말	98.2.말
동 관	80A	M	17,160	21,800	27	23
동관부속	엘보100A	EA	17,722	18,366	4	25
동용접재	B CUP-3	KG	15,500	28,000	80	70
	FLUX	EA	1,000	2,000	100	100
주 철 관	NO HUB 100×3M	EA	28,150	32,300	15	23
PVC 관	VG ₂ 100A	M	5,970	11,000	84	35
강 관	백관100A	M	6,568	7,726	17	11
보 온 재	G/W40t×00A	M	2,799	3,654	30	25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A사는 현장에서 자재반입에 검토, 재검토를 거쳐서 자재를 반입한다. 자재 청구시 아예 여

자 최근에 투입된 자재비에 대해 당월 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회사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때가 때이니만큼 종합건설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어려운 난국을 그나마 쉽

게 풀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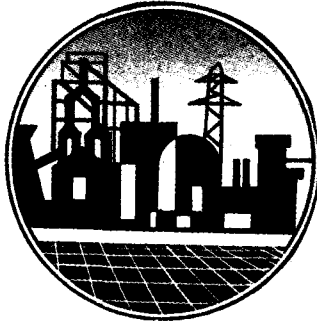
3. 올해의 건설경기 전망

올해 국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30%나 감소하는 등 IMF 관리체제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당분간은 9~13%의 건설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 IMF 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마련을 위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토출되었고 또 IMF가 본격화되는 올해 국내성장률은 환율절하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내수위축으로 지난해 대비 1%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지가하락이 지속되는데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축소, 금융경색 등으로 상반기에 36.1%, 하반기 26% 등 지난해보다 연평균 30.6%나 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국내투자가 점차 증가되면서 건설투자 역시 내년에는 13.0%, 2000년에는 11.5%, 2001년에는 10.5%, 2002년



에는 9.0% 등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IMF한파로 민자유치사업이 격감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타격은 심각하다.

건설교통부는 IMF한파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사정을 감안, 올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건설공사 1건만을 선정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자유치사업은 지난 95년 10건, 96년 7건 97년 6건 등 과거 민자유치사업실적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IMF 이후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건설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부공사의 조기발주,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현금납부차액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4. 정부의 대책마련

정부는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의 14.5%를 점유하고 고용비율 또한 9.5%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일 뿐만 아니라 IMF 사태로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건설산업의 실태가 하도급업체와 전자재 업체등 연관산업의 연쇄부도 발생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지대함을 인식하여 건설산업 진흥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

정부는 건설업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인식하여 건설업의 회생을 위해 ▲조기발주 ▲선금지급 확대 ▲기성지급 기간 및 에스케레이션 적용기간 단축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철폐 ▲턴키공사 특약설정 ▲현금납부 차액 및 계약보증금 전액 반납 ▲사급자재 관급전환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하나둘씩 내놓았으나 이것만으론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고 있다.

□ 전문건설업계 보호대책

현재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가 최우수한 상위 일반건설업체에(A등급)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토록 되어

IMF시대의 설비건설업계 위기극복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 A등급 업체 중 10개사 이상이 부도발생으로 신용평가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확대 개선하여야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를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받은 A등급업체만 면제토록 하고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청구시 하도급공사비를 구분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 절차를 신설하여야 한다.

공사의 질적향상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가하도급 방지 및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부대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완전 배제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직접공사비가 실제공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도급자 지명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 WTO 협정시 의무하도급제도는 국제적으로 양해된 제도로서 일반건설업계의 외주비율(하도급비율)은 실제로 60% 이상이므로 자국업체 보호차원에서 대외개방대상 공사인 5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하도급비율이 개선,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우선 시급한 것으로

부가세 및 법인소득세 납부시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결제일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자재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요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당초 계약서상의 자재비로는 지속적인 공사를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보류 또는 중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한다면 부실공사 또는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전 설비업계가 도산 위기로 치달아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자재의 적정한 가격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계설비건설업이 건설산업은 물론 국내 경제전반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간과하지 말고 더 늦기전에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과 보완등 특단의 조치를 시급히 이루어야 한다.

5. 대한설비공사협회의 노력

IMF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대한설비공사협회는 설비건설업의 존립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지

원방안 및 대책을 관계요로에 건의 또는 호소하는등 강도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대한설비공사협회는 그동안 업계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당국에 수차에 걸쳐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억제와 자금유통 활성화를 촉구하였고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확보책과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법인세·부가세의 납부기한 연장등 특단의 조치를 건의하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건설업계 신용보증기금으로 IMF금융 5억불 전용등 1천 2백억원의 기금활용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특약 허용, 선금결제도 활성화, 기성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개선책을 조치하였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제 시행 강화와 건자재 가격 급등 억제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설비공사업계의 절실한 요구사항인 하도급금액 저가 방지책으로서 대한설비공사협회가 지난해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 추진한 하도급 부대입찰제도 개선안이 확정되어 앞으로는 원도급자의 입찰시에 하도급 부대입찰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87% 미만일 때는 적격심사에

차등 감점을 주고 최하 77% 미만일 때는 원도급자는 낙찰대상에서 탈락하도록 제도가 시행되어 하도급 단가의 적정확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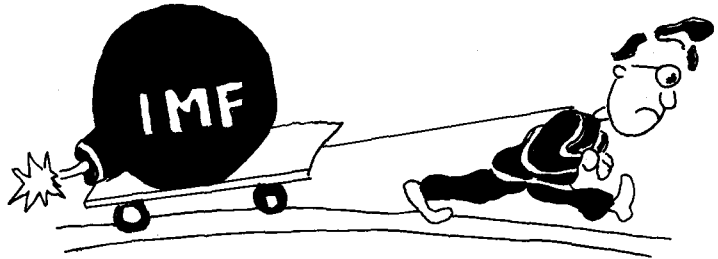
6. 건설업계의 대정부 건의

건설업계는 IMF시대의 조기 종식을 위해 공공주택 20만가구 상반기 발주, 정부 투자기관의 선금지급을 의무화 등 건설경기 진작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설협회를 비롯한 대한설비공사협회등 건설관련단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원석)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진작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단연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4.5%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OC 사업비를 정부 지출 삭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한편 공공부문 주택 20만가구도 상반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를 요구했다.

이는 정부에서 건설업체의 부도급증과 경기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건설업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거나 일선 행정관서의 미숙지 등으로 현재까지 가



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건설투자가 타산업의 수요를 촉진하는등 경기선도기능이 커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건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건단연은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IMF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선금 지급률이 저조, 자금난에 봉착한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정부투자기관의 선금지급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건단연은 자금난에 처한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부도방지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부금납입자에게 무담보·무보증·무이자로 용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도 품목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일반건설업체가 발행한 어음이 시중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할인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수수료 과다 징수사례가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밖에 국세, 지방세를 건설진성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공사 물가연동제 실시, 건설자재가격 인상 억제제도 마련도 건의했다.

7. 지자체 및 종합건설업계의 전문건설업계 보호 노력

전문건설업계의 연쇄도산을 막고 관급공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에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 안산시, 전북 전주 남원시 등이 최근들어 대형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여파로 지역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

IMF시대의 설비건설업계 위기극복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3월부터 발주되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 했다.

이들 지자체는 선급금, 기성금 등을 지급할 때 원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지급 약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기성금지급 날짜와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통보, 하도급공사비가 제때에 전달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신고 접수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지급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인천시와 시 산하 기초단체도 지난 3월부터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하도급업체들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고 있다. 또 관급공사를 수주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며 그동안 발주기관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켜지지 못했던 선금·기성금 지급도 제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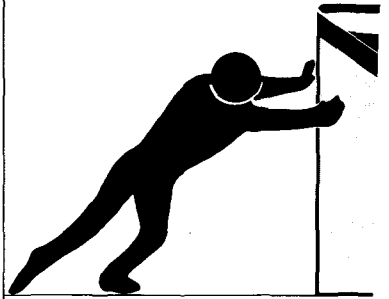
인천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현금지급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설

업계 자금난 등으로 농장 지급되거나 어음으로 지급되는 실정임을 감안, 앞으로는 공사입찰 공고 당시 입찰요건에 하도급 직불제를 명시,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키로 한 것이다. 시는 또 계약금액의 20~50%에 해당하는 선금과 기성대가의 지급을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하고 물가변동과 설계변경등 공사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관급자재 활용등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의 이같은 하도급업체 보호조치로 전문건설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전국의 지자체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해서 그 효과는 그리 가시적이지 않다. 또한 행정기관의 일선 담당자들의 미숙지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건설업체도 외환위기로 금융경색이 심화된 지난해 11월 이후 금융권에서의 어음할인이 어려워져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이 극심해지자 공사대금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대형 건설업체들은 공사대금으로 최소 2개월에



서 최장 6개월 정도의 어음을 지급했었고 어음을 받은 하도급업체들은 금융권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으나 어음할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현금지급 비중을 늘리고 어음결제기간도 대폭 줄이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 아파트현장을 갖고있는 벽산건설의 경우 지난 1월까지의 하도급업체에 5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2월 이후에는 결제방법을 2개월짜리 어음 50%와 현금 50%로 바꿔 지급하고 있다. 우성건설과 동양고속건설도 종전 4개월 이상이던 어음의 결제기간을 2개월 이하로 단축하는 동시에 일부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 업체들도 어음기간·현금결제 비중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정도로 대금지급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의 일부에 적용되고 있어 자금난이 심각한 설비업계는 매우 아쉬워 하면서 앞으로 전 전문업종에의 확대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8. 설비공사업계의 자구노력

IMF 사태로 각종 정부지원 대책이나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설비공사업체 스스로의 경영 혁신등 적극적인 대비 태세를 정립해야 한다.

올해는 전반적인 건설물량 축소로 우리의 수주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짐에 따라 극심한 과당경쟁이 예상된다. 과당경쟁에 따른 덩핑저가수주는 곧 기업경영 악화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연쇄도산등 공멸의 사태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공사 실행에 있어 차입금 과다로 인한 금융비용을 억제하고 원가절감에 대한 경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참담하고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설비건설업계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물론 보다는 설비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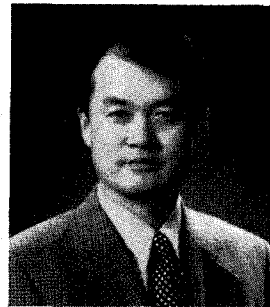
켜 고품질의 시공을 창출하므로써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아무런 특징이 없는 회사는 살아남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떨어지고 있는 국내경제와 외국의 우수기업들과의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각 회

사는 자기들만의 시공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로 공법개발, 공사 현장의 효율적 관리, 원가절감 등 기술과 관리 측면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함께 노사간에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단합하여 경제적 난국을 헤쳐나갈 때 길은 반드시 보일 것이다.

하도급직불 활성화· 보증방식 개선등 설비업계 활성화 방안 마련



강팔문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장

설비부문은 우리 경제가 침체되면서 상당기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설비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건설업체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지속되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우 심각한

IMF시대의 설비건설업계 위기극복



경영난을 겪고 있다. 건설업체의 부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업체가 시장원리에 의거, 도태된다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GDP의 20%를 상회하는 건설산업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 건설산업의 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부문의 침체와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설비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IMF체제 이후 금년 3월까지 150개 업체가 부도로 쓰러졌다. 건설투자의 감소는 건설업계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공토목 투자는 정부에서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나 민간건축이나 설비부문은 우리 경제가 침체되면서 상당기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설비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건설투자를 활성화하여 건설산업과 연관산업의 과도한 침체를 방지하는 동시에 심각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민간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축소하는데 이어 존치 필요성을 계속 점검하여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외

국인이 자유롭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의 분양업과 임대업을 완전 개방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마비상태인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한다.

둘째, 공공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도 공공사업을 최대한 상반기에 발주토록 하고 SOC투자를 위해 휘발유, 교통세를 10% 인상하여 공공사업 투자에 활용키로 한데 이어 앞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토지공사로 하여금 건설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채권으로 발행하여 매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투자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IBRD 자금 2억불을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융자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돕고 아파트 중도금이 제대로

대출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주택할부금융사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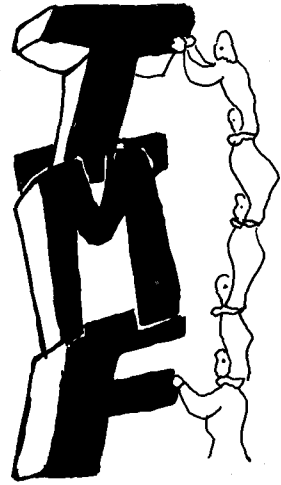
건설산업은 IMF체제를 맞이하기까지 부실이라는 전근대적인 문화를 떨치지 못하였으며 공정한 경쟁률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업역간의 대립과 함께 공정한 하도급 관행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다 보니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많고 그러면서도 보호는 보호대로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형적인 사례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인데 지급보증이 면제되고 있는 대형업체가 도산됨에 따라 설비업자를 포함한 하도급자들이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시공실적과 같은 외형보다는 경영실태 등 내실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하도급직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 연대보증에 의한 보증방식을 신용평가에 의한 보증방식으로 전환하여 연쇄도산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계설비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기계설비품셈에 환경설비분야등 플랜

트 분야를 신설하고 플랜트 건설분야의 주요 공종에 대한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발주기관들이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 기계설비분야의 신기술·신공법·신자재 개발 등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설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은 향후 2~3년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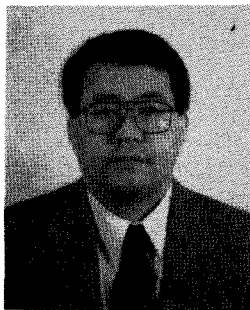
후에도 과거와 같은 호황국면은 다시 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제는 물량위주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발전과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추진하는 기업만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설비산업은 전문화와 특화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건설업종이면서도 이번 경기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어 선두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건설기본관리법 제정 등의 법제정비와 기계설비인의 윤리강령 제정 및 이의 실천등 설비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발전 노력에 대한 성과가 예상치 못한 외적요인에 의해 그 빛이 바랜 느낌이다.

최근 발표된 「IMF자금지원하의 산업별 영향과 전망」이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침체, 투자축소와 함께 공급과잉 또는 비효율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투자조정이 촉진될 것이며 IMF와 정부간에 설정한 거시경제 목표치에 따라 경제를 운용한다고 할 때 올 설비투자도 전년대비 19.1% 감소되며 건설투자 역시 10.5%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기술자 양성은 경쟁의 밑거름



홍진관 / 경원대학교 건축설비학과 교수

우리 업계가 맞이하고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는 바로 잘 교육되고 전문화된 기술인력에 의해 그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

최근 IMF의환위기로 온 국민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IMF시대의 설비건설업계 위기극복

특히 건설업의 경우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건설은 전반적인 긴축기조에 따라 시장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 해외건설도 국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에서의 투자자금을 벌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공사 수주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국내 건설시장 규모를 경상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0.2% 감소한 78조5천4백억원으로 잡고 있어 국내 건설시장을 통계로 잡기 시작한 70년대 초반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해외건설 수주시장도 약 4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백억달러 내외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이 전반적인 불황으로 예상되는 건설업계 전체의 전망에 따라 설비업계도 최근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프로젝트 중지에 따른 일감부족과 중견업계의 부도와 같은 불황의 조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IMF위기가 있기 전에 이미 UR서비스 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민간/시공부문의 단계적 개방이 이루어져 왔고,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공공/시공부문의 개방이 단행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교육개방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설비업계도 바야흐로 무한기술경쟁 시대와 무한 교육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되어 위기타개를 위한 대안으로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및 신공법의 개발과 연계된 새로운 설비지식과 이론의 교육이 제시되고 있다. 흔히 교육을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제일 확실한 장기투자라고 말한다. 우리 업계가 맞이고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는 바로 잘 교육되고 전문화된 기술인력에 의해 그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설비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업계의 전반적인 비효율 부분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투자조정은 물론 설비교육의 역할을 새삼 강조하며, 인재양성과 교육적인 관점에서 본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첫째, 기술을 부리는 사람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사람에게 대한 투자를 더욱더 늘려 소수정예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무한경쟁이 행해지는 시대에서의 보편적인 생존논리는 그

분야에서 누구와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춘 기술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비관련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확보, 전문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산학협동을 통한 재교육 기회의 확대 등 우수한 인력을 설비분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산·학·연이 협력하여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요약하여 말하면 우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우리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설비기술은 그 발전과 변화가 신속하며 실제 응용시 경험적인 요소가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현재 설비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가진 기술과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자세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업계는 그 규모가 아직 영세한 업체가 많아 어느 정도의 경력이 되면 전문기술자보다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특수 실무분야나 전문기술분야 기술자로서의 생명이 선진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하나의 문제로 인

식되고 있다. 다시말해 수십년 이상 한 분야에 종사해 풍부한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고급 전문기술자의 층이 얇아 개방화한 시대에서 기술경쟁에 불리한 문제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경제규모나 국민소득등 종합적인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장시간 걸릴 어려운 문제로 생각된다. 이런 차제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동종업체의 병합과 같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초영세한 규모를 지양하고 중간기술자나 고급기술자들이 전문기술 분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말해 초영세한 규모를 중규모화 하도록 조정하여 고급 전문기술자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생적인 토양을 인위적으로나마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설비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설계나 시공·유지관리가 잘못될 경우 잘못에 대한 결과나 그 효과가 순간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그 영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실제에 비해 그 심각성이 잘 인식되지 못하여 세인의 관심을 끌만한 파격적인 정책개선이거나 그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법적



인 배려가 타 분야에 비해 느리고 충분치 못하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설비분야의 기술인들이 가져야 되는 소양이나 덕목은 바로 휴머니티 즉, 인간애가 아닌가 생각된다.

설비란 용어 자체가 물리법칙이나 이론을 토대로 인간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이 그 1차적인 목적이라 볼 때 인간을 중요시 하는 휴머니티를 기본적인 소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다.

어려운 IMF위기를 맞이하여 설비업계의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 전문교육시설의 확보와 같은 교육투자 확대 ▲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산학협동을 통한 재교육 기회 확충 ▲ 전문화된 고급기술자의 수급을 가능케 하는 토양 제공, 그리고 인간애를 가진 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준비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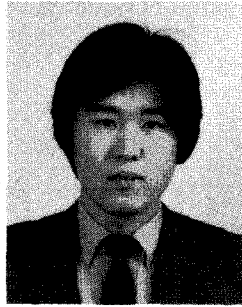
현 제반문제의 해결을 앞당기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끝으로 새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100대 과제를 보면 설비업계에서 관심 가져야 할 몇가지 정책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와 에너지절약시책 강화, 주택보급률 100% 달성, 친환경적인 생산체제 확립 및 첨단기술 개발지원, 공기오염문제의 개선, 폐기물관리체계의 합리화 등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로 요약되는 정책이다. 이 정책지표들은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설비업계가 비중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문제로, 관련부문에서의 투자와 기술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IMF위기와 더불어 업계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만 이제까지 노력해왔던 것처럼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 될 수록 그에 비례하여 광범위해지는 설비업 고유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설비업계의 발전도 그와 병행하여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분야의 발전을 위한 설비업계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건투를 기대해 본다.

IMF시대의 설비건설산업 경영환경



문정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계획학 박사

역동적인 경제환경의 변화과정에서 건설산업과 설비산업은 자금의 자금경색과 경기침체에 의한 경영압박 뿐 아니라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의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IMF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고금리, 긴축재정에 경기는 침체하고 실업과 도산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외국자본의 동향에 따라 환율과 주가지수가 매우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이다. 건설업

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사상 유례없는 자금난, 수주난으로 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공투자의 감축과 민간고정자본투자의 급속한 감소로 사상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계설비업도 당분간 고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지난 2월 산업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올해 국내 민간기업들의 설비투자규모는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돼 지난해 52조7천6백98억원에 비해 13.8% 감소한 총 45조4천7백99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기업들의 올해 설

비투자계획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정하기 전후에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투자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건설분야의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의하면 1998년도 상반기 국내 건설공사의 수주실적(경상가격기준)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13.7%가 감소한 34조 7,5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종별 수주액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97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각각 16.5%, 12.4%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12조 4,700억원과 22조 2,8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투자위축, 경기침체 및 금융경색이라는 경제여건과 아울러 앞으로의 경영환경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긴급지원금융의 조건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재정 및 금융긴축, 금융개혁, 무역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도높은 경제정책 프로그램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벌써 상당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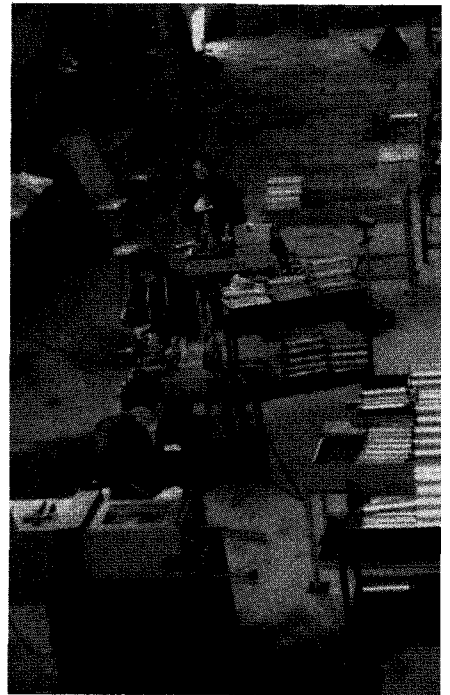
앞으로의 경제환경은 IMF가

권고하는 거시경제들에 따라 상당기간 저성장과 재정·통화긴축 및 고금리 기조로 유지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산업 개혁과 금융기관, 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결합제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재벌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및 상호 지급보증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구조조정 및 외국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리해고제 도입, 실업보장체계 강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조치와 주식 및 채권시장의 개방, 수입선 다변화 및 무역보조금제도 폐지 등 무역 및 자본자유화 조치도 이미 상당수준 현실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결국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은 저성장·긴축재정·고금리 기조하에 고물가·저소비를 수반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들면서 강도높은 금융 및 기업구조,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실업과 기업도산이 증가하는 과도적 구조조정상태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역동적인 경제환경의 변화과정에서 건설산업과 설비산업은 자금경색과 경기침체에 의한 경영압박뿐만 아니라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미 부도사태는 위험수위에 육박해 있으며 공공투자의 감축과 민간투자의 극심한 위축으로 영업여건 개선의 전망도 극히 어두운 실정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쓰러질지 모른다. '98년 상반기중 금융시장이 기능을 회복하고 통화량 조절에 대한 정부통제력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도 건설기업들의 계열화가 촉진되고 건설업에서의 자발적 퇴출기업이 급증하고 외국업체와 중견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우호적 M&A가 활발해지는 등 IMF체제하의 경쟁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여건의 전개와 더불어 건설 및 설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환경에도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부터 시장의 원리에 의한 경쟁의 틀이 새로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산업이나 기업의 보호자가 될 수 없으며 요즘같은 경기의 경색과 금융시



장의 혼란 와중에서도 과거와 같은 특혜성의 육성·지원조치는 불가능하다.

향후의 제도변화는 자율적 규제와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기능 회복에 그 초점이 주어질 것이다. 즉, 산업구조 조정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진입·퇴출 장벽, 업역보호장치, 불합리한 입찰계약제도, 보증제도, 하도급 및 공동도급 규제 등 건설 및 설비산업제도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 건설관련 자격제도의

IMF시대의 설비건설업계 위기극복



단순화·통합화 및 건설업역간 진입규제 완화 ▲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탄력적 허용 및 부대계약제의 도입 등 하도급 관련 규제 개선 ▲ 경쟁을 제한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 등 낙찰제도 개선 ▲ 등급별 심사제(유자격자 명부제도) 활성화 ▲ 신용평가 및 보증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산업, 좁게 말하자면 기계설비공사업은 전체 건설업 중에서도 가장 창조적이고 기능적인 업종이다. 그리고 이 분야는 향

후 건축물이 보다 고급화되고 인텔리전트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장래를 위하여 설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신장하는 일은 앞으로 전개될 건설시장의 세계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극히 중요하며 여기서의 관건은 당면한 IMF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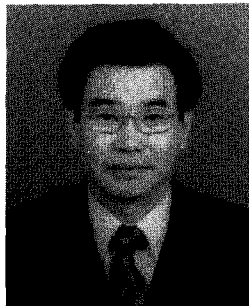
경기침체로 인한 경쟁의 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양상은 설비산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형태의 계열화 내지는 협력관계를 형성시킬 것이다. 앞으로 형성될 새로운 구조와 질서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기업만이 이 어려운 시절에 살아남을 수 있다. 비단 설비공사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은 매출과 외형 중심의 경영전략을 내실 위주로 전환하여 수주 중심의 영업활동을 자금운영 능력에 따라 사전 조절하고 기 수주공사에 대한 관리계획(자금수요 및 동원계획 등)을 재점검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단기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하도급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타사업장의 부도여파 영향을 차단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와같은 단기적 전략구사와 더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화 전략을 수립하는 일도 긴요하다. 무리한 수주보다는 수주시 예상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전문화의 득실을 따져봐야 하며 가능한 경영자원을 경쟁우위가 있는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 및 제도환경에서는 재무구조와 건전성에 기초한 신용평가 등급이 자금조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될 것이므로 유상증자,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해 나가는 전략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금흐름을 중시하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체제의 정착이 필요하다.

결국 IMF시대의 도래는 우리의 모든 경제환경과 경쟁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어설픈 관행이 통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앞으로는 참으로 엄정한, 신용과 실력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어둡고 불투명한 전망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규범적인 방향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들 규범은 많은 고통과 노력을 요구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못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F학점시대 우리는 이렇게 극복한다



유성현 / 동남기연(주) 대표

IMF한파로 건설산업이 최악의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이다. 수주만능, 외형키우기와 같은 무리한 수주경쟁에서 벗어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시대에서 선진적인 기술 경쟁체제를 확립할 때이다.

1.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

당사는 IMF사태 발생 이후 현장소장이 정확한 실행물량을 산출하고 능력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품질의 고급화를 꾀하는 한편 적기적소에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원가절감을 위하여 자재 협력업체를 소수 정예화하고 전 현장의 분기별 투입예정량을 집계하여 일괄구매를 한다면 기존 구입단가보다 3%의 추가적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업체 및 현장간의 정보 교류를 통하여 가격변동과 품귀

자재에 대해 대비토록 하고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잉여자재, 수압용 자재, 가설자재 등에 대해 잉여자재는 구입 거래처로 반품하고 기타 자재는 본사 직원이 공장에서 직접 상품화 해서 현장에 재공급 하고 있다.

이와함께 IMF 한파로 인한 자재가격 폭등과 결제조건 변경에 따른 대비책으로 건설사에 협조를 구하여 근간에 투입된 자재비에 대해서 당월 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재의 수급불균형 현상은 일시적이라고는 하나 장기적으로 진행될 때는 업계 전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므로 대한설비공사협회는 자재공급의 원활화와 가격인상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신뢰로 쌓은 믿음은 수주안정에서 자금의 안정에까지

전문건설업계의 가장 큰 병폐가 무작정 외형을 키우는데 있다고 본다. 자금이 부족해지면 수입무사주의식 덩핑수주를 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품질을 저하시키고 부실공사의 근원을 만든다. 이러한 덩핑 경쟁으로 우리 회사도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 해도

IMF시대의 설비건설업계 위기극복

15개 이상의 현장을 운영하지 않을 생각이며 외형이 아닌 내실있는 경영 위주로 회사를 조금씩 키워나갈 생각이다. 설립된지 얼마 안된 회사지만 내실경영을 하면서 자금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한다.

자금경색이 심할때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현재의 급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급박하게 밀려드는 IMF한파에 회사경영은 자꾸만 어려워져 속수무책이었다. 직원과 근로자들은 경영자의 어려움을 알았는지 자체 부서장회의를 통해 급여인하 문제를 논의하였고 여기서 10~20%까지 급여 조정을 하자는 협의(안)이 토출되었다는 것이 필자에게 전달되었다. 임직원은 물론 근로자들까지도 이 안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한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자고 다짐하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고 있을 때, 경영자로서 눈물겹도록 고마움을 느끼며 거기에서도 무한한 힘을 얻는다.

어려움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자재 거래처가 우리를 믿고 밀어주며 안심하고 납품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 신뢰에 의한 믿음으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또한 당사가 당좌거래를 하지 않았던 것이 한 몫을 톡톡히 하였고 결재방법도 받을 어음, 개인 약속어음, 표지어음 등으로 결재하여 부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와함께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금리와 자금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는 있지만 그동안 금융권과의 신뢰구축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으므로써 최저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자금난을 해결하고 있다.

3. 신공법 개발로 IMF를 이겨 나간다.

공정관리 및 신공법 개발은 회사의 장래를 보는 지표와 같다.

집을 지을 때는 대들보를 잘 세워야 하듯이 회사는 기틀을 잘 갖춰야 한다. 지난 96년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ISO 9002 인증을 취득했고 그 이후로 ISO 규정 지침서에 의해 문서의 표준화, 시공의 표준화를 이루고 지침에 따라 빈틈없는 공정관리를 하여 「선안전 후시공」 원칙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실시공을 평소 가치관으로 삼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2인 1조에서 1인 1조 공중 체제로 구축하여 실무진의 책임시공과 매주 2회 이상 공정별 회의를 통해 시공

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다.

여기서 도출되는 제안을 문서화하여 소장들과 매달 정기 기술회의를 갖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 적용한 시공기술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도출되고 여기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전 현장에 반영시키고 있어 회사 전체의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얻은 첫 결실이 96년도 벽산건설 시흥재개발 현장에 적용한 WORK SHOP 운영이다. WORK SHOP 운영으로 최고의 품질과 책임경영에 의한 원가절감 효과를 얻어 대한설비공사협회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비록 IMF여파로 고금리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과 긴축재정에 따른 공사물량 축소, 과당경쟁에 따른 덩핑공사 난무, 자재값 인상등으로 시공원가 부담가중 등 그야말로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선 설비업계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설비 선진화에 한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